

# 전남대 교수 공채 재심결정 논란 확산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심사결과가 반복되자 탈락자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악학과 교수도 대학 측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위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 기아급병창 교수 공채에 지원한 A씨는 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이 부당하게 재심을 결정하고 원심에서 탈락했던 B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심 심사위원 중 특정인은 B씨와 선후배 관계로 제척되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대학 측은 원심 심사 결과는 철저히

## 탈락자 소송·감사원 감사 청구 교수 재심결정 위법·부당 반발 대학측 심사, 편향성 문제 원인

하게 감추면서도 재심 결과는 공개하며 B씨를 최종 면접 후보자로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심에서 최종 면접 후보로 선정됐다가 재심에서 결과가 반복돼 탈락했다.

A씨는 법원에 재심결정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대학 측이 부당하게 원심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악학과 교수들은 "공정관리위원회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는

데 어떠한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는지 심사위원장의 요구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교수는 "공채 지침에 따라 재심에서도 심사위원 5명의 두 배인 10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8명을 추천하고 이 중 5명을 위촉했다"며 "이의 제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한 재심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고 밝혔다.

C교수는 "대학본부가 재심 사유로 심사의 편향성을 제시했으나, 음악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다"며 "최고 최저 점수 상하 커트리는 제도가 공채심사 매뉴얼에 명시돼 있는 데도 대학본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C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심사의 모든 과정에 특정한 선발이라는 예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개입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학이 공채 결과 조작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는 원심에서 전공 1단계 질적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고,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대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원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사의 편향성이 확인됐고 재심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두 배수를 추천할 필요도 없다"며 "재심 심사위원 한 명과 B씨가 선후배 관계인 것은 규정상 제척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인호 기자

## 만취한 고교생, 택시기사 폭행해 입건

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기념해 새해 첫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1월 일 오전 4시49분께 광주 남구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9)씨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택사에서 구토를 했으며 기사가 세차비를 요구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군은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해진 새해를 기념해 이날 자정부터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군이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부른 것을 확인한 뒤 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군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난다. 택시기사의 말투가 시비조로 들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군이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뺑소니 허위신고' 20대 보험사기 일당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권모(23)·정모(22)·김모(20)·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5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노래방 앞 이면도로에 세워둔 벤츠 차량을 A(34)씨의 쏘나타 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해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들이받힌 차량 주인이 아니냐"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차량에 타고 있던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쏘나타 차량이 자신의 벤츠 운전석 뒤편을 들이받은 장면을 목격한 권씨는 운전자 A씨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게된 뒤 동네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임형택 기자

## 이유 없이 파출소에 나사못 뿌린 30대 자수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 나사못을 뿌려 순찰차 타이어를 부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파출소 앞에 나사못 수십개를 뿌려 순찰차 타이어를 팽크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달 23일까지 권선파출소에 3차례, 수원시 장안구 울전파출소에 5차례씩 나사못을 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울전파출소를 찾은 박씨는 "경찰에 불만이 있어 못을 뿌렸다"고 범행 사실을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내연녀 납치·감금 50대 남성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남양주경찰서 강력팀이 내연녀를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정모(56)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장씨는 내연관계인 정모(53·여)씨가 절교를 통보하자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골프연습장 앞에서 정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흥기로 자해해 협박한 뒤, 남양주시 일패동까지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승용차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면서, 납치 행각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경찰서는 장씨와 함께 장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흉기를 춘천경찰서에 인계했다.

## 완도해경, 명절 불법 어업행위 등 집중단속

완도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민생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동안 설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명절 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과 서민경제 침해사범 등이다.

또 자원남획과 분쟁유발형 불법조업, 어획물 절도, 원산지 위조 유통,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해경은 집중단속 기간 경비정 등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으로 민생침해범죄를 적절히 단속"하며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안전한세월호 선체 직립 결의 6일 오후 목포산항만에서 세월호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 주관으로 '안전한 세월호 선체 직립을 기원하는 위령제와 직립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 전남 자치단체 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기간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적이 지난해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발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수는 24건으로 2016년 61건 대비 37건(60.6%)이 감소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제도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

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조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가 2009년 도입했으며,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100%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도 매년 공사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발주기관인 전남 지역 일선 자치단체가 오랜 도급관행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동도급제가 외면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

들이 종합건설업체 위주의 오랜 도급관행과 업무량 증가 때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와 구례, 담양, 무안, 신안, 영암군은 수년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지역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동도급제에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